

화담숲, '2021 단풍축제' 사전예약 실시

경기도 광주 화담숲은 단풍축제를 앞두고 15일 오후 1시부터 홈페이지에서 사전예약을 진행한다. 올해 단풍축제는 10월 16일부터 11월 14일까지다. 쾌적하고 안전한 관람을 위해 하루 관람을 1만 명으로 제한하고 시간당 정원제로 운영하기에 사전예약을 해야 한다. 화담숲은 '한국관광 100선'에 2회 연속 선정된 수도권 단풍명소로 내장단풍 등 400여 종의 단풍이 물드는 장관으로 유명하다.



골목상권 침해 논란 카카오 상생기금 3000억 마련

택시·마트 호출 전면 폐지 꽃·간식 배달 서비스 철수

무분별한 사업 확장...여론 악화
케이큐브홀딩스 사회적 기업 전환
공정위, 김 의장 제재 절차 돌입



김범수 카카오 의장

카카오가 파트너 지원을 위한 기금 3000억 원 조성 등을 담은 상생방안을 내놨다. 무분별한 사업 확장으로 우려가 커지면서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규제 논의가 급물살을 타는 등 여론이 악화되자 서둘러 진화에 나선 것이다.

●계열사 정리...사업철수도 검토

카카오는 논란이 되는 골목상권 사업 철수와 기금 조성 등을 골자로 한 상생방안을 14일 발표했다. 우선 골목 상권 논란 사업에 대해 계열사 정리 및 철수를 검토할 방침이다. 혁신과 이용자 후생을 더할 수 있는 영역을 중심으로 사업을 전개할 것이라 설명했다. 관련 업계와 마찰을 빚어온 모빌리티 분야에선 택시의 스마트 호출 서비스를 전면 폐지하고, 골목상권 직접 진출 우려가 있던 기업 고객 대상 꽃, 간식, 샐러드 배달 중개 서비스는 철수하기로 했다.

카카오는 또 소상공인 등 파트너들과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5년 동안 상생 기금 3000억 원을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김범수 의장이 지분 100%를 보유한 케이큐브홀딩스는 미래 교육과 인재 양성 같은 사회적 가치 창출에 집중하는 기업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김범수 카카오 의장은 "최근의 지적은 사회가 울리는 강력한 경종이다"며 "카카오와 모든 계열 회사들은 지난 10년간 추구해왔던 성장 방식을 과감하게 버리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성장을 위한 근본적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다"고 말했다.

●정치권, 전방위 규제 가속도

카카오가 서둘러 상생방안을 내놓은 이유는 정치권과 정부가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규제 논의에 속도를 내고 있기 때문이다. 국회에는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등 플랫폼 규제 관련 법안이 발의돼 있으며, 정부도 보조를 맞추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온라인 금융플랫폼이 금융상품을 비교·추천하는 등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금융당국에 등록해야 한다고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카카오의 사실상 지주사로 평가받는 케이큐브홀딩스 관련 신고를 빠뜨린 혐의로 김범수 의장을 직접 겨냥한 제재 절차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카카오가 상생방안을 내놨지만 논란은 쉽게 사그라들지 않을 전망이다. '공정'이 시대적 화두로 떠오르면서 국정감사를 앞둔 정치권의 칼날이 더욱 매서워질 것이라 얘기다.

여론도 좋지 않다. 리얼미터가 YTN 의뢰로 만 18세 이상 500명을 대상으로 빅테크(대형 정보기술 기업) 규제에 대한 공감도를 조사한 결과 '무분별한 사업 확장을 막기 위한 적절한 조치라 생각한다'는 응답이 51.0%로 나타났다. '기업의 활동을 제약하는 과도한 규제라 생각한다'는 응답은 35.3%였다. 다만 일각에선 규제만 강화될 경우 혁신 서비스의 등장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김명근 기자 dionys@donga.com

공정위, 글로벌 플랫폼 사업자 갑질에 철퇴

안드로이드 OS 탑재 강요 구글에 2000억 원 과징금

구글, 개발단계 경쟁 상품 통해
"반경쟁 행위 플랫폼 제재할 것"
세계 첫 '구글 갑질 방지법' 시행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스마트폰 등 기기 제조사에 안드로이드 운영체제(OS)를 강요한 구글에 2000억 원이 넘는 과징금을 부과했다. 구글과 애플 등 글로벌 앱 마켓 사업자의 갑질을 막는 법도 세계 최초로 시행됐다. 업계는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규제가 본격화하는 신호탄으로 보고 있다.

●"전례 찾기 힘든 경쟁 제한 행위"

공정위는 삼성전자 등 제조사에 '포크 OS' 탑재 기기를 생산하지 못하게 해 경쟁 OS의 시장진입을 방해한 구글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074억 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14일 밝혔다.

포크 OS는 구글의 안드로이드를 변형한 OS로, 구글에는 경쟁 OS가 된다. 공정위에 따르면 구글은 기기 제조사에 '파편화 금지 계약'(AFA)을 체결하도록 강제했다. 안드로이드 소스코드를 변형해 OS를 개발하거나 사용하지 말라는 계약이다.

특히 앱 장터인 플레이스토어 라이선스 계약 등을 불모로 삼아 기기 제조사에 사실상 선택권을 주지 않았다. AFA는 스마트폰뿐 아니라 스마트워치 등 모든 스마트기기에 적용됐다. 구글은 이를 통해 시장 지배력을 크게 강화했다. 구글의 모바일 OS시장 점유율은 2019년 97.7%에 달했다.

조성욱 공정위 위원장은 "구글은 개발 단계부터 경쟁 상품의 탄생 자체를 철저히 통제, 전례를 찾기 힘든

경쟁 제한 행위를 했다"며 "앞으로도 시장을 선점한 플랫폼이 독점적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하는 반경쟁 행위를 법을 엄정히 집행해 제재하겠다"고 말했다.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도 시행

이른바 세계 첫 '구글 갑질 방지법'이라 불리는 개정 전기통신사업법도 14일 본격 시행에 들어갔다. 앱 마켓 사업자의 자체 시스템을 활용해 결제하는 '인앱결제' 강제를 금지하는 법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법의 취지가 제대로 실현될 수 있도록 하위법령을 조속히 정비하고, 앱 마켓 사업자의 정책변경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할 계획이다.

플랫폼 기반의 빅테크(대형 정보 기술 기업) 규제는 세계적인 추세로 앞으로 더 강화될 전망이다. 실제로 EU 집행위원회(EC)는 구글이 모바일 OS와 앱마켓 시장에서 시장지배력을 남용한 행위에 대해 과징금 약 5조 6500억 원을 부과한 바 있다. 인앱결제 강제를 금지하는 법안도 미국과 유럽 등에서 추진 중이다. 미국의 경우 지난 달 상원에 활성 이용자 수 5000만 명을 초과하는 앱 마켓 사업자의 인앱결제 강제 등을 금지하는 내용을 포함한 오픈 앱마켓 법안이 발의됐다.

김명근 기자



14일 서울 서초구 '삼성 청년 소프트웨어 아카데미'(SSAFY)에서 열린 간담회에 참석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오른쪽)과 김부겸 국무총리(왼쪽 두번째), 뉴시스

이재용 첫 대외행보는 '청년 일자리'

김부겸 국무총리와 'SSAFY'서 간담회 참석
3년 동안 총 3만 개 청년 일자리 창출 나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 달 가석방으로 출소한 뒤 첫 공식 외부일정을 가졌다. 김부겸 국무총리와 만나 정부가 추진하는 청년 일자리 프로젝트 '청년희망 ON 프로젝트' 사업에 삼성이 참여해 앞으로 3년 동안 3만 개의 청년 일자리 창출에 나서기로 했다.

삼성은 14일 국무총리실과 서울 역삼동에 위치한 '삼성 청년 소프트웨어 아카데미'(SSAFY) 서울캠퍼스에서 간담회를 가졌다. 행사에는 김부겸 총리와 이재용 부회장 등이 참석했다. 출소 후 회사 현안을 챙기면서도 대외활동은 자제해온 이 부회장은 '청년 일자리 창출'이라는 행사 취지를 고려해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삼성은 취업연계형 SSAFY 교육생을 연간 1000명 수준에서 내년부터 2000명 이상으로 증원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3년 간 총 3만 개의 청년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다는 방침이다. 삼성은 지난 달 24일 240조 원의 투자계획을 발표하면서 "SSAFY를 전국 단위로 확대하고 사업 규모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 부회장은 "청년들의 희망을 위해 최선을 다해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한편 삼성은 2018년 SSAFY를 출범하고 청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소프트웨어 교육 사업을 본격화했다. 2018년 서울과 대전, 광주, 구미 등 4개 지역에 캠퍼스를 열고, 올해 7월 부산에 '부울경 캠퍼스'를 추가 개소했다. 2021년 상반기까지 수료한 교육생 2087명 가운데 76%에 달하는 1579명이 취업에 성공했다.



프롬바이오가 생산 판매하는 제품들.

프롬바이오, 공모가 1만8000원으로 낮춰

14일부터 일반 청약...3개월간 환매청구권 부여

건강기능식품 기업 프롬바이오(대표이사 심태진)가 28일 코스닥 상장을 앞두고 14일부터 일반 투자자 청약을 시작했다.

프롬바이오는 앞서 실시한 수요조사 이후 공모가를 1만8000원으로 확정했다. 기존 희망 공모가 밴드보다 10% 이상 낮은 가격이다. 최근 바이오 기업의 기업공개(IPO)를 냉정하게 바라보는 시장 상황과 개인투자자 등의 눈높이에 맞추기 위해 고심한 결과다. 공모 후 예상 시가총액은 2490억 원이다. 프롬바이오는 코스닥 상장으로 432억 원에 해당하는 240만 주를 공모 예정이다. 주관사는 NH투자증권이다.

이번 프롬바이오 상장에는 일명 '테슬라 요건'으로 불리는 환매청구권(풋백옵션)이 적용된다. 기술특례 상장이거나 이익미실현 기업 상장일 경우 청약을 통해 배정받은 주식이 상장 후 일정기간 공모가 이하로 하락하면 공모가의 90% 가격으로 증권사에 다시 팔 수 있는 권리다. 프롬바이오는 '테슬라 요건'을 적용받아 상장일로부터 3개월까지 환매청구권이 부여된다. 일반 투자자 입장에서는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는 제도적 보호가 되는 셈이다.

김재범 기자 oldfield@donga.com

"이변은 없었다" 오너 뜻대로 흘러간 남양유업·사조산업 임시주총

남양 "한앤코에 매각 안할 것"
10월에 경영안정화 추가 논의
사조산업, 정관 일부변경 가결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 주진우 사조그룹 회장

오너리스크와 경영권 분쟁에 휩싸인 두 식품기업 남양유업과 사조산업이 14일 나란히 임시주총을 열어 관심을 모았지만 큰 이변은 없었다.

남양유업은 이날 서울 강남구 본사에서 열린 임시주총을 통해 사모펀드 운용사 한앤컴퍼니(이하 한앤코)에 회사를 매각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더욱 공고히 했다. 한앤코 측이 제시한 정관의 일부 변경의 건, 이사 신규 선임의 건, 감사 선임의 건 등 3가지 안건을 부결 및 철회시켰기 때문이다. 이에 한앤코 측은 "계약이 유효함에도

불구하고 지배구조개선 목적의 집행임원제도 도입 및 이사 선임 안건이 부결되고 별도로 상근감사 선임안이 사전 철회된 점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남양유업은 10월 임시주총회를 추가로 열어 경영 안정화를 논의한다고 밝혔다. 회사 측은 "아직 구체적인 안건과 날짜는 결정되지 않았으나 경영 안정을 위한 이사회와 경영진 재구성, 임원 변동

등의 안건이 다뤄질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한앤코가 낸 주식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인 만큼 남양유업과 한앤코 사이 법정 다툼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그동안 경영 또한 홍원식 회장 일가가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 이 같은 상황에서 남양유업이 주주들을 만족시킬만한 경영해신안을 내놓을 수 있을지 의문이 제기된다. 경영진 교체는 선언했을 뿐, 홍 회장을 비롯한 대주주들의 교체는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한 상황이다.

사조산업은 소액주주들이 오너인 주진우 사조그룹 회장의 해임을 요구했으나 사실상 오너의 승리로 일단락됐다. 그동안 주 회장이 일감 밀어주기 등 편법승계 의혹으로 소액주주들과 갈등을 빚어온 만큼, 소액주주들은 주 회장 해임과

함께 소액주주들이 추천한 기타비상무이사 후보를 이사회에 임명시킬 계획이었다. 송종국 소액주주연대 대표를 기타비상무이사 감사위원으로 선임하는 안건을 제안한 것도 이 때문이다.

하지만 주 회장 측이 정관 변경을 제안해 맞불을 놓았다. 변경 정관에는 '감사위원은 전원 사외이사로 한다'는 문구를 넣었다. 소액주주 측 기타비상무이사가 감사위원으로 진입하지 못하도록 막기 위해서다. 결국 이날 서울 중구 롯데손해보험빌딩에서 열린 임시주총에서 감사위원회 구성 등 정관 일부 변경의 건이 참석 지분의 74.66% 동의를 얻어 가결되면서, 송종국 소액주주연대 대표를 기타비상무이사로 선임하고자 했던 안건 또한 폐기됐다.

정재욱 기자 jjay@donga.com